

<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

1. ②

제시된 근대 사상가는 루소이다.

ㄱ. 루소는 개별 의지나 개별 의지의 단순한 합인 전체 의지가 아니라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ㄴ.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기 때문에 법 제정 등 정치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재산권을 중요한 자연권으로 보고 그것의 보호를 위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로크이다.

ㄹ. 루소는 국민의 의사가 대표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의회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지 않았다. 근대 의회 중심의 민주 정치가 다수 인민에 의한 전체 정치 및 중우 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 대표적인 학자는 프랑스의 토크빌이며, 로크 역시 비슷한 문제 의식에서 교육받은 자나 귀족, 부유층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2. ④

④ (가)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정당의 역할이, (다)에는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결정 기구를 향해 국민 의사를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

① 정당은 공식적인 정책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이다.

② 주어진 자료만 보면 노동자 단체와 경영자 단체는 임금 인상률, 즉 물질적 이해관계로 인해 충돌하였다.

③ 정부의 최저 임금 결정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및 시민 단체의 대표가 모인 최저 임금 조정 위원회의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서 노동자 단체의 최소 7% 인상 주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⑤ 정책 결정 과정은 투입에 해당하는 (가) 또는 (다)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거쳐 (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가)→(다)→(나)→(라) 또는 (다)→(가)→(나)→(라)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3. ①

① 국민의 알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② 알 권리에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의 업무 즉 국민 다수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가 포함된다.

③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되거나 왜곡되므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할 수 없다.

④ 언론이 공익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사탐영역 정치 정답 및 해설

다.

⑤ 인터넷 토론장과 같은 열린 공간은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4. ②

ㄱ.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것이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ㄴ.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환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 국정 감사나 국정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대통령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권한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된다.

ㄹ.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며,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다.

5. ③

③ 제시문에서는 정당이 다양한 이익 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취합하는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①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제시문은 정당 정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정당의 수가 많음으로써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제시문은 유권자가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당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시문은 이익 집단의 이익 표출이 정당을 통해 조정되지 않으면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6. ④

④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선거권은 적극적 자유로서 국가에의 자유를 추구한다.

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③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한편 재외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허용하는 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

⑤ 재산권과 같은 자유권은 선거권과 같은 참정권보다 먼저 보편화되었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사탐영역 정치 정답 및 해설

7. ④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법률 제정 기관인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A는 행정부, B는 입법부, C는 사법부이다.

ㄴ. 입법부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ㄷ. 사법부는 행정부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ㄱ. 입법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 행사된다고 해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재판소가 해당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입법부는 해당 법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ㄸ.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 즉 재판에 대하여 견제하는 수단이다.

8. ②

② 국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도 국정 감사를 할 수 있다.

① 유권자 중 36.7%가 투표하였으며, 그 중 찬성률이 79%이므로 유권자 중 과반수가 찬성한 합의형 여론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③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에 관한 분쟁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가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 소환제는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의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나 직권 남용 행위를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는 조례를,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9. ⑤

제시된 헌법 전문과 헌법 제34조에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ㄸ. 복지 국가를 위한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포함된다.

ㄷ. 복지 국가는 자유 방임주의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빈부 격차나 빈곤, 사회적 약자의 희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념이다.

ㄱ.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사회적 강자에 대하여 합리적 차별을 가하는 것을 인정한다.

ㄴ.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10. ⑤

ㄸ.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였으므로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성을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사탐영역 정치 정답 및 해설

가질 수 있었다.

ㄴ. 추천제와 윤번제는 아테네 시민 모두에게 공직을 담당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ㄷ.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모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으로서의 자유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ㄹ. 아테네에서는 시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할 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다. 누구나 추천에 의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추천에 의해 뽑힌 사람들은 평의회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의의 의사 일정 등을 관리하는 집행 역할을 했을 뿐이다.

11. ③

ㄷ. 냉전이 종결되고 지구촌에는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ㄴ. 국제 연합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데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국가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ㄱ.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 연합의 국지적인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은 활발해지고 있다.

ㄹ. 남북 문제는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의미한다.

12. ②

ㄱ. 대통령, 국회의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시·도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지역구 시·도 의원, 구·시·군 의원, 구·시·군 자치 단체장의 선거 소송 1심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한다.

ㄷ.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법률에 정해진 구제 절차를 거친 후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이 아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13. ③

③ 병은 강제성을 갖는 정책을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중시하는 유권자 등록 제도와 달리 투표율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① 을이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모두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투표권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사탐영역 정치 정답 및 해설

- ② 투표를 강제한다고 해서 당선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④ 국민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는 보통 선거의 원칙은 을의 방식과 병의 방식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병의 방식이 을의 방식보다 보통 선거의 원칙에 더 충실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병의 방식은 보통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을의 방식과 다르다.
- ⑤ 갑, 을, 병 모두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투표권을 갖고 그것을 직접 행사하여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4. ④

(가)는 국제 연합 총회에서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방식이고, (나)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이다. (다)는 국제 통화 기금(IMF)의 표결 방식으로 기금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한다.

④ 주권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 연합 총회는 국제 사회에 대한 이상주의의 관점에, 국가 간의 힘의 우열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와 국제 통화 기금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 ① 국제 연합이 현실적으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중앙 정부라고 볼 수 없다.
- ② 강대국으로 구성된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 ③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도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간에는 거부권 유무라는 투표권 가치의 차등이 존재한다.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 ⑤ (가)와 (나)는 1국 1표 제도이므로 주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15. ⑤

⑤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 ① 국회 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추구하는 의원 내각제의 요소이다.
- ②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내각이 의원으로 구성되어 내각과 의회가 융합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의원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 ③ 국회가 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내각 불신임 제도와 일맥상통한다.
- ④ 엄격한 권력 분립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헌법 규정이다.

16. ②

ㄱ. (가)는 지역적 기구, 포괄적 기구,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유럽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특정 지역을 범위로 하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포괄적으로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사탐영역 정치 정답 및 해설

사안을 다루고, 국가를 가입 주체로 하는 국제 기구이다.

ㄷ. (다)는 세계적 기구, 제한적 기구, 비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사면 위원회,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린피스에 이에 해당한다.

ㄴ. (나)는 세계적 기구, 포괄적 기구,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국제 연합은 (나)에 해당하지만 세계 무역 기구는 제한적 기구로서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라)는 지역적 기구, 제한적 기구,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라)에 해당하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는 세계적 기구로서 (라)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④

④ B시기는 냉전이 완화되고, 중국과 일본, 독일, 제3세계가 성장하던 시기로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

① 트루먼 독트린(1947년)은 유럽에서의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선언으로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② 베트남 전쟁 이후 발표된 닉슨 독트린(1969년)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줄이겠다는 선언으로서 냉전의 완화를 초래했고, 몰타 선언(1989년)은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만나 냉전을 종식시키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던 선언이다.

③ A시기는 냉전 체제로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안보 외교, 제3세계 국가와의 자원 외교를 추구하였다. B시기에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교가 추진되었으나 본격적인 북방 외교는 냉전이 해체된 C시기에 나타났다.

⑤ 냉전 체제가 종식된 후 국제 사회에서는 경제적 실리 추구 외교가 본격화되었다.

18. ①

①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사회주의의 등장은 국가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과 무관하다.

② 서양에서는 신성로마제국의 붕괴를 초래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중앙 집권적인 민족 국가가 성립되기 시작했는데, 각 민족 국가는 주권을 내세워 교황의 지배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③ 사회 계약에 대한 홉스와 로크 사상의 차이를 통해 주권의 속성과 주권의 소재에 대한 변천을 학습할 수 있다.

④ 자연법 사상과 계몽 사상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⑤ 왕권 신수설, 왕권 민수설, 사회 계약설의 차이를 통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권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다.

19. 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사탐영역 정치 정답 및 해설

⑤ 11~16대 비례 대표 선거에서는 지역구 대표자 당선에 영향을 미쳤던 유권자의 표가 비례 대표 당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1표의 가치가 유권자 간에 다르다는 문제를 유발한다. 17~19대 비례 대표 선거에서는 1인 2표제를 실시하여 모든 유권자의 표가 동등하게 비례 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줌으로써 평등 선거의 원칙이 강화되었다.

- ① 소선거구제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다수 대표제이다.
-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이 지명한 자 중에서 국회 의원의 일정 수를 선출 하였으므로 국회 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중선거구제에서는 후보자가 난립하고 선거 운동 지역이 넓으므로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소선거구제보다 적게 든다고 볼 수 없다.
- ④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을 15, 16대에서는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주었으나 17~19대에서는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주었다.

20. ③

우리나라 11,12대 비례 대표 배분 방식에 따르면 제1당인 A당에게 비례 대표 60석 중 2/3인 40석을 배분하고, 남은 20석을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는 것은 A당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한 100석 중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활용하여 표를 완성하면 아래와 같다.

정당	지역구 의석수	지역구 득표율	비례 대표 의석수	총 의석수
A	100	45	(40)	140
B	(40)	22	8	48
C	30	16	(6)	36
D	20	13	(4)	24
E	(10)	4	2	12
계	200	100	60	260

③ B당은 지역구 득표율(22%)에 비해 지역구 의석률(20%)이 낮아 과소 대표된 측면이 있다. E당은 지역구 득표율(4%)에 비해 지역구 의석률(5%)이 높아 과대 대표된 측면이 있다.

- ① A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50%이고 총의석률은 50%를 넘는다.
- ② A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45%이고 지역구 의석률은 50%이다. E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4%이고 지역구 의석률은 5%이다. 두 정당은 지역구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률이 높다.
- ④ 총의석 수는 C당이 36석이고, D당이 24석이다.
- 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A당)이 존재하므로 연립 내각의 구성은 불필요하다.